한국전쟁시 대구지역 피난민 실태 분석

梁 寧 祚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 언
2. 전시 피난민 대책의 특징과 한계
3. 대구지역으로의 피난민 유입과정과 실태
4. 대구지역 피난민의 수용과 구호 활동
5. 결 어

1. 서 언

전쟁에서는 흔히 남부여대 한 피난민들의 이동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한국전쟁에서도 빈번한 전선의 이동으로 많은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남북한 피난민의 규모는 대략 5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 전쟁기간 남북한 주민들은 몇 차례의 피난을 반복하였으

1)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1951, p. D34. 사회부는 1951년 5월 현재 전국의 피난민 총수가 5백 75만명에 달하였다고 집계하였다.

며 피난의 성격도 다양한 양태를 보여 주었다.

먼저 북한군의 남침으로 당시 38선 근처와 서울주변의 주민들이 1차로 남쪽으로 피난을 하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서울이남 지역의 주민들이 대규모로 대구, 부산 등을 향해 이동하였다. 이어 북진 직후 중공군의 참전으로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남쪽으로 월남하게 되고, 또 1·4후퇴 시기 서울과 이남지역의 주민들이 1차 피난 때보다 훨씬 대규모로 피난하였다.

특히 1950년 6월과 1951년 1월 두 차례의 서울 실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은 경부가도를 따라 대구-부산까지 대규모로 피난을 가게 되었으며, 대구는 상존 인구 40만여 명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서울 시민들을 포함하여 남하한 피난민들로 인해 70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피난도시로서의 일면을 지니게 되었다.[2)]

따라서 대구지역 피난민 연구는 피난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단면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난민 문제는 개인의 증언이나 회고록,[3)] 그리고 남북한 인구이동 등과 관련한 몇 편의 연구[4)]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편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월남 인구이동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피난민 수치조차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구지역 피난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주로 자료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쟁 당시의 피난민 관련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또 당시의

---

2) 『대구매일신문』 1957년 7월 25일자,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1968, p. 14 재인용; 홍경희, 「한국의 도시화」, 『경북대논문집』 제7집, 1963, p. 363.

3) 유진오 외,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 김성칠, 『역사 앞에서』, 1993; 나종일,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예진, 1991;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1989; 정일권,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5 등.

4) 김운태, 『해방30년사』, 성문각, 1976; 강정구, 「해방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전쟁사』,역사비평사, 1996; 강광식, 「전쟁과 남북한 사회와 문화」,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6권, 1992;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잔류, 도강, 피난」, 『역사비평』 2000 여름; 졸고,「한국전쟁시 피난민 정책」,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자료조차 상호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5]

본 고에서는 전시 미군 보고서 등 피난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가용한 자료들[6]을 비교 분석하여 대구지역 피난민에 관해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즉, 첫째, 전시 1, 2차 피난민 소개정책의 특징과 한계, 둘째, 대구지역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의 유입 과정과 그 규모, 셋째, 대구지역 피난민에 대한 구호활동과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구지역 피난민의 실태와 작전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전시 피난민 대책의 특징과 한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가 당면한 큰 문제중의 하나는 민심의 동요를 막는 것과 함께 피난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었다.

정부는 남침직후 6월 25일 가장 먼저 질서유지와 민심동요의 예방차원에서 「긴급명령」 제1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하달하였고,[7] 내무장관이 06:30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8]과 「치안명령」 제

5) 당시 피난민 정책, 인원, 소개, 구호 등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소실되거나 폐기되어 남아 있지 않다. 국내 자료중 피난민 문제에 관해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973 및 부산일보사, 『비화 임시수도 천일』, 1984에 수록된 관련자들의 증언내용이다.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16집, 제17집 : INTELLIGENCE REPORT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AILY REPORT KOREAN BULLETIN, 1997 : 8086th AU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June 1950 and December 1950 to January 1951* ; Hqs 8th Army, *War Diary ; GHQ 8th Army, Eighth Army and ROK Refugees to August 1950* ; CG EUSAK to CINCFE, Message : 1st Cavalry · 24th · 25th Division, War Diary 등이다.

7) 『한국전란 1년지』, pp. CC48-49 ; 경찰 발표에 의하면 당시 불순분자들이 저지른 태업활동은 없었지만 도시지역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수없이 증가되고 있었다. *Evacuation of*

26호를 하달하여 경비를 강화케 하였다. 또한 정부는 생필품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품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경제적인 혼란을 예방하고자 28일 「긴급명령」 제2호인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하달하였다.[9]

다음으로 고려된 조치는 피난민에 대한 긴급 대책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전쟁으로 인한 피난 비상계획이나 철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으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고,[10] 점차 상황의 급박함으로 인하여 그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데 분주하였다.

1950년 6일 27일 새벽 1시 피난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비상국무회의에서 이범석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 철수를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참석자의 대부분이 "안일하고 낙관적"이었다. 결국 이 심야 회의에서는 수원 천도만을 결정하고 시민철수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11] 거의 같은 시각인 새벽 2시경 이미 대통령도 대구를 향해 피난을 떠나고 있었다.[12]

정부는 서울 실함 이후에도 체계적인 피난민 철수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에 전력하고 있었다. 먼저 동년 7월 8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7월 9일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피난민 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민사부를 설치하였으나 전장의 이동속도가 급변하여 효과적으로 피난민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13]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와 지시에 따라 대구에서도 대구지구사령부와 경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p. 2-3.

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1967, p. 631.

9) 『한국전란 1년지』, pp. C48-C49.

10)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 2.

11) 『민족의 증언』 제1권, pp. 33-34.

12) 위의 책, p. 53. 대통령 수행비서 황규면은 "27일 새벽 2시 피난길에 올라 일단 대구까지 내려갔던 이박사가 다시 북상하자고 하여 동일 하오 대전까지 되돌아 왔습니다"고 하였다.

13) 국방부 『일반명령』 제40호(1950. 7. 9),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북 경찰국에서 긴급 군·경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14] 여기에 대구지구사령부의 이한림 대령, 박금윤 중령, 이기건 중령, 경북경찰국의 최치환 총경, 박충근 경감 등이 참석하여 각 기관이 소임을 분담하고 식량 및 유류 확보 문제와 전시상황에 대한 토의를 갖고, 비상사태대책에 관한 지휘관회의를 열어 적 오열 검색, 후방치안, 공산군의 대구침투 분쇄 등 전시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어 경북 도지사의 주관으로 관공서, 정당사회단체, 사업장의 대표를 도청 회의실에 소집하여 '전시대책위원회'(비상사태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15]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도청의 각 해당책임자, 군·경 지휘관 및 대규모 사업장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은 주로 위원회 조직, 군사 원호, 민심안정 및 계몽, 직장별 궐기대회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은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피난민이 밀려오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부는 피난민 수용과 식량배급 등 실질적인 전시행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구시는 도청으로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서 비상근무규칙 즉, 식량확보, 생활필수품통제, 이재민수용, 기획, 운수, 정보, 상수도설비 및 교량설비, 시유 건물정비, 구호, 기타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정하였다.[16]

그러나 전선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선의 위급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구 대책위에서는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민심안정 계몽에 관한 사항, 직장별 궐기대회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하는데 그쳤고, 비상계획이라든가 피난민들의 구호를 위한 식량 및 주

14)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2권, 1995, p. 61.
15)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3권, 1995, p. 131.
16) 대구시청은 1950. 7. 1일 현재 시장·부시장·총무과·학무과·재무과·사회과·산업과·보건과·건설과 등 7과 34계로 편성되어 있었고, 전시 동안 교육청이 독립되어 학무과가 폐지된 것 이외 변함 없었다. 위의 책, p. 227.

택의 확보문제 등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피난민들이 전투지역에 몰려 작전에 장애가 될 수 있었으므로 7월 10일 각 장관의 명의로 충청·전라·경상남북도 지사 앞으로 「피난민 분산에 관한 통첩」을 하달하였다.[17] 이 통첩의 내용은 대전-대구-부산을 중심으로 밀집되고 있는 피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조치와 도청을 비롯한 행정관서, 군경의 검문과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대전-대구-부산 도로를 메우고 있었다.

<표 1>에서와 같이 7월 9일 미 제8군사령부가 대구에 설치되고 또 7월 16일 정부가 대구로 천도하자 긴박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각급 학교는 일제히 휴교에 들어갔고 7월 21일 계성중학교 운동장에서 침략 규탄 궐기대회가 열리고 27일에는 문화극장에서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각 동별로 자위대가 조직되었으나, 왜관, 군위, 영천이 점령당하자 대구위기설이 급격히 나돌기 시작하였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8월 18일 대구북방 12㎞까지 적이 육박하여 가산혈전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팔달교 너머 칠곡 동명지점까지 잠복하여 침투해 들어온 적병이 박격포탄을 시내 대구역 주변으로 사격한 것이다. 즉, 포탄 3발이 태평로 3가 전 대구미창 근처 판자촌에 떨어져 시민 일부가 희생됨으로써 대구시는 극도로 긴장에 휩싸이게 되었다. 사태가 심상치

<표 1> 전쟁 초 주요기관의 대구이동 상황

월 일	내 용
7월 9일	미 제8군사령부 대구설치
7월 14일	육군본부 대구로 이동
7월 16일	정부 수도를 대전에서 대구로 천도
8월 18일	정부 수도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천도
9월 5일	육군본부 및 제8군사령부 부산으로 이동
9월 22일	육군본부 대구로 복귀

17) 『관보 제384호』(1950. 7. 20일자), 『한국전란 1년지』, pp. C49-50.

않게 되자 이날 도청에 자리잡고 있던 정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이전을 개시하였고 대구시민에게도 소개령이 하달되었다.[18]

이어 시내에는 포고문 전단이 뿌려졌다. 그것은 한국정부와 경북도청이 찍어낸 포고문으로, 정부가 대구로부터 부산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대구도 인민군에 점령당할 것이라는 성급한 민심으로 흉흉해지고 전선의 포성마저 귓전에 들려오고 있어 패닉 상황이 야기되었다.[19] 그러나 곧 전세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자 당일 오후 소개령은 취소되어 피난에 나선 시민들 중 상당수가 뒤돌아 섰지만, 정부는 이날 대구 천도 한 달여 만에 부산으로 이동하였다.[20]

대구시는 질서유지와 적절한 대처를 위해 '전시 국민 생활요강'이란 것을 작성하여 각 가정에 배포하여 시민과 피난민들의 상호 협조를 호소하였다. 대구는 정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 달여간 임시수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피난길은 일단 모면하였지만 갑자기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자 '정신무장, 양식절약, 생활의 간소화' 등을 호소하면서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북도내 관민일체로 조직된 '전시대책위원회'에서 주도하였으며 전시 국민생활 요강이 전해지자 시민간에 절제운동이 전개되었고 한때 번창하였던 각종 요정을 비롯하여 유흥업소도 모두가 폐점하였다.[21]

한편 정부가 피난민 문제에 관하여 미군과 처음으로 논의한 것은 1950년 7월 25일경 대구의 정부청사에서였다. 이때 참석자는 미 대사관 1등 서기관, 유엔 한국정부 복지담당 고문관, 내무부 차관 및 국장, 경찰국장, 사회부 차관, 미 제8군 헌병, 방첩대, 작전 및 정보참모 등이었으며, 이 회의에

18) 『대구시사』 제2권, p. 61.
19) 대구직할시, 『대구의 향기』, 경북인쇄소, 1982, p. 82.
20) 당시 일부의 시민들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고 일부는 소식을 듣고 뒤돌아 섰고, 일부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그 숫자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구의 향기』, 위와 같음.
21) 『대구시사』 제3권, p. 131.

서 한국정부와 미국의 대표들은 피난민의 이동과 흐름의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의 연락단을 제8군사령부와 각 사단에 배속하고, 군사령관이 피난민 및 민간인 이동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며 피난민 이동을 통제하기로 합의하였다.[22] 워커 제8군사령관은 이러한 한·미 간의 협조 토의 결과를 승인하고 한국정부의 신성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적인 지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어 극동사령관에게 피난민에 관한 한·미 간의 지원 협조가 이루어졌음을 보고하였다.

워커 장군은 이어 피난민 취급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였고 여기에는 한국경찰의 지원사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공식적으로 미군에 한국경찰이 배치되었으며, 군 작전을 위한 마을 소개를 지원하기 위해 각 사단에 3명의 한국경찰 연락담당이 파견되었다.[23] 이렇게 낙동강방어선 시기의 피난민통제는 전반적으로 피난민 대열에 적 게릴라의 침투를 막고 피난민으로 야기되는 군사작전의 제반 장애를 해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 게릴라들이 피난민을 가장하여 미군을 공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었다. 지리산 이현상 부대는 8월 10일 대구 달성 가창면 일대에서 미군 통신부대를 기습하여 미군 20여 명을 살상하고 무전기 14대, 소총 20정을 약탈하였으며, 9월 6일 청도 지구에서 인민군과 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7월 27일 경북도당 책임자 배철이 지휘하는 유격대는 대구비행장과 미군 포 진지를 급습하기도 하였다.[24]

이리하여 대구에는 치안국의 비상경비총사령부휘하에 전국에서 모여든 경찰관으로 전투대가 편성되어 대구 주변의 적 오열 검색과 후방치안을 맡게 되었다. 즉, 서울시경 병력은 칠곡방면, 경기도와 충남경찰은 팔공산방

---

22) Eighth Army, *Informal Check Slip, Subject : Control of Refugees*, 26 July, 1950,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23) Eighth Army, *Eighth Army and ROK Refugees to August 1950*, pp. 2-3.

24) 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52, 1953, p. 411.

면, 충북경찰은 지천방면, 경북경찰은 청도, 신동방면, 강원경찰은 청송방면에 각각 배치되어 피난민을 검색하고 통제하였다.[25]

한편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공격으로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2차 피난민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2차 피난민 철수계획을 수립한 것은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했을 무렵부터였다. 평양, 원산 요부에서 중공군을 저지하지 못하면 서울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서울시민들은 전세가 갑자기 반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밀리게 되자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 참전 이후 특히 서울시민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길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12월 중순경 동빙고, 마포에 부교가 설치되어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먼저 피난하도록 포고문이 게시되었고, 이어 12월 24일 서울시민 소개령도 발표되었다.[26]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한 1950년 12월 4일 38선 접경 및 그 이북전역에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50여 만명에 달하는 이북 피난민 구출을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졌다.[27] 평양을 포기하던 12월 5일 신속히 국립박물관 등 주요 물품의 후송 명령을 하달하였고, 12월 8일 부녀자의 소개 허용이 발표된 후 12월 하순부터 피난 수송 및 구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다.[28] 초기작전에서의 교훈을 고려하여 북한 피난민 대열 속에 침투해 있는 오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다.

서울 시민의 경우 12월 30일까지는 이미 84만명이 철수했고, 이듬해 1월 3일까지는 나머지 30만명이 피난하여 1월 5일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수도는 완전히 텅 빈 유령의 도시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정부자체도 12월 하순부터 소개를 시작하여 1월 3일의 각료 철수를 마지막으로 부산 도청에 천도를 마쳤다.[29]

---

25) 『대구시사』 제3권, p. 127.
26) 『민족의 증언』 제3권, p. 260.
27)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 (제9회 임시국회), p. 597.
28) 『임시수도 천일』 (하), p. 316.
29) 위의 책, pp. 313-314.

1951년 1월 17일 사회부장관은 대구와 부산에 운집한 대규모 피난민을 각 지역별로 산개 계획을 발표하여 피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30] 헌병들이 피난민들을 검문소, 교통 통제소 등에 집결시켰고, 피난민수용소에서 한국경찰의 지원을 받아 피난민 심사작업을 실시하였다.[31] 이와 같이 사태의 급변과 엄동설한 속에서도 피난민의 철수는 전쟁 초의 교훈을 살려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정 사회부장관은 "우리는 피난민소개, 구호계획을 미리 짜놓았어요. 학교마다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급식과 숙소를 제공하고는 남으로 보냈지요"[32]라고 하였고, 총무처장 비서 김덕보도 "12월 24일 총무처 직원과 정부 각 부처 중요문서와 물자를 부산으로 소개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이때에는 후퇴즉시 정부나 국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민을 소개 구호하는데 있어서는 사회부 및 교통부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았다"[33] 고 하여, 2차 피난은 1차 피난 상황을 교훈으로 하여 비교적 잘 준비되었고 소개 정책도 잘 이루어졌음을 회고하였다.

이상 피난민 소개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950년 7월말 낙동강선으로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은 부산교두보에서 결사의지로 고수작전을 수행하였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방어작전 시기 피난민 처리문제를 안고 방어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전쟁초기 정부의 피난정책의 특징은 피난민 철수와 수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작전적인 측면이 우선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두보 내에서 피난민을 가장한 오열이나 좌익의 폭동을 방지할 수 있었고 작전에도 기여하였다. 2차 피난시 소개정책은 1차 피난 상황을 교훈으로 하여 비교적 사전에 잘 준비되었고 소개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

30)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1. 17일자).

31) 최승평(역), 존 웨스트어버, 『한국에서의 전투지원』, 병학사, 1978, p. 72 ; 「피난민강제소개 및 양곡정책에 관한 긴급질문」(1951. 1. 20), 『국회사』, pp. 498-502.

32) 『민족의 증언』 제3권, p. 316.

33) 「총무처장 비서 김덕보 증언」, 위의 책, p. 315.

3. 대구지역으로의 피난민 유입과정과 실태

(1) 남침 직후 피난민의 대구 유입

대구에 피난민이 가장 먼저 몰려든 것은 수도 서울이 함락된 직후이다. 즉, 28일 밤 대구역에는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도착하였다. 이들은 서울-수원 주민들이 26일 하오부터 서울-부산선 열차통행이 두절되자 수원에서 열차를 이용하여 대구와 부산으로 각각 향한 것이었다. 대구역 광장에는 각 지역의 피난민들이 즐비하게 집결되었다. 피난민들이 도착하자 서울에서 피난민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보고로 대구시청은 초비상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대구시 공무원들은 피난민들을 각지에 분산 수용하고 여성공무원을 비롯하여 대한부인회 회원들도 이들을 지원하여 피난민들을 구호하는데 동분서주하였다.

북한군의 남침 당시 서울의 인구는 한강 이북에 175만명, 영등포 및 그 주변에 25만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여기에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서울이북 지역에서 피난 온 주민들을 합하면 서울 주변에는 많은 피난민이 집중되고 있었다. 대체로 전쟁발발 직후 서울시민 가운데 피난을 떠난 숫자를 전체 시민의 약 50%인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34]

서울-시흥-과천 도로는 피난민들과 군 병력이 혼잡을 이루게 됨으로써 장사진을 이루었고,[35] 수원-대전 간 주민들도 임시 수도 대전에서 전쟁을 지도하고 있던 대통령 일행이 7월 1일 새벽 3시 이리-목포를 거쳐 부산을 향해 피난을 떠났고, 밤새 정부요인들이 피난 갔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36]

---

34)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 1.
35) 서경석, 『전장감각』, 샘터, 1999, p. 19.

대부분의 피난민 이동경로는 국도와 철로를 따라 대전까지 왔다가 도보나 철도편을 이용하여 4번 국도를 따라 대구와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당시 수원 인구 50만명 중 상당수가 남하하였고, 조치원, 평택, 천안 등의 주민들도 노약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피난길에 올랐다. 따라서 1950년 7월 대전과 그 인근 지역인 부산과 대구 및 보다 안전한 남쪽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약 200여 만명 이상이 피난을 하고 있었다.[37] 정부는 부대이동을 방해하는 피난민들을 광주 서남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한국군의 철수방향이 대전-대구-부산 쪽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이동하였다. 따라서 경부 축선의 작전지역에서는 피난민문제로 인하여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대열 속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집단적인 피난에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38]

이때의 상황에 대해 유진오 박사는 "어느 사이 피난민 행렬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큰길을 따라가는 행렬이고 하나는 기차 길을 따라가는 행렬이다"[39]라고 하여 도로와 철길이 피난민들로 가득하였음을 회고하였다.

한편 경부가도 축선을 방어하고 있던 미군들은 낙동강에서 8㎞ 이내의 주민과 피난민을 강제 소개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창녕과 영산 지역의 30만명의 피난민을 부산으로 후송하였으며, 대구 북방에서도 피난민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8군은 최전선 근처에서 5만명의 피난민을 관측하고 즉각 후방으로 철수시켰으며, 또 군위 부근에 집결한 피난민을 대구부근으로 남하시켰다. 따라서 대구 북방의 도로상에는 약 18만명의 피난민이 강변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다.[40] 한편 미군은 피난민들을 소개한 이후 민간복장을 착용한 북한군이 피난민에 섞여서 진지 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난민들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

---

36) 『민족의 증언』 제1권, p. 315.
37)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 1993, p. 536.
38) 『전장 감각』, p. 31.
39) 유진오, 「서울탈출기」, 앞의 책, p. 36.
40) 마르쿠스 세르바체, 「피난민 구호를 회상」,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pp. 257-258.

조치는 작전적 측면이 우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난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가혹한 것이었다.[41]

대구지역에 피난민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7월 16일 정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천도하면서부터이다. 이때의 상황을, 『대구시사』는 '30만의 피난민을 합쳐 대구시민이 7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42] 다른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방어선 내선 대구지역에 약 40여 만명이 집결되었다고 하였고[43], 또 7월말 대구의 인구는 피난민으로 배가 늘어 80만명이 넘었다고 하고 있다.[44] 이를 통해 볼 때 1950년 7월말 현재 대구지역에 집결된 피난민의 규모는 대략 30-40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구 시내 각급 학교를 비롯한 주요 시설은 군이나 군 기관에 접수되어 작전수행의 거점이 되고 있었고, 상공장려관을 비롯한 대구역 주변의 각종 시설 혹은 민가에는 서울 등지로부터 남하한 피난민들에 의해 붐비고 있었다.[45] 피난민들은 주로 신천 건너편과 대구역 뒤편 등, 동부와 북부지대 및 비산동 등 서부 외곽지 일대 등에 주로 모여들었다.[46]

북쪽으로부터 밀려오는 피난민의 유입으로 빈터나 유휴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택,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도로까지도 점유되는 폭발위험에 직면할 만큼의 상태가 되었다. 인구의 격증은 극심한 주택난을 초래했고 1가옥에 수세대가 밀집하는 현상을 자아냈으며 무허가 판잣집이 늘어나고 무계획적이며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주변으로 뻗어나갔다.

전쟁초기 대구로 유입된 인구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

41) 위의 책, p. 75.

42) 『대구의 향기』, p. 8.3

4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 p. 536. 이에 의하면 대구인구는 약 50여 만명이 증가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형,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비교」,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p. 150.

44) 셰르바체, 「피난민 구호를 회상」, pp. 254-255.

45) 『대구시사』 제2권, p. 61.

46) 『대구시사』 제3권, p. 52.

않는다. 다만, 『대구시사』에서 집계한 30여 만명이라는 수치는 1950년말 대구 인구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어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950년 말 대구인구가 최저로 감소되고 있었던 상황과 1950년 7-8월 피난민이 몰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왜 1950년말 대구인구가 최저수치로 떨어졌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 2>의 대구인구 통계자료와 앞에서 언급한 피난민 30만 기록, 그리고 당시 전황의 유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전쟁 초 대구 피난민의 규모를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첫째, 전쟁발발 이후 정부의 부산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대구에는 약 30여 만명의 피난민이 집중되었다. 그 후 정부의 부산 이전과 일시나마 대구 소개령이 하달된 8월 18일 직후부터 피난민을 포함한 대구시민의 일부가 빠져나가 대구 피난민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시 서울수복이후는 각지의 피난민들이 상당수 귀환하였다. 둘째, 중공군의 참전이 알려지고 유엔군이 전선에서 밀리게 되자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주민들이 동요하여 피난에 나섰으며, 대구 시민들도 상당수 다시 피난길에 나서게 된다. 1950년말 269,406명으로 감소된 대구 인구수는 이때의 상황이 반영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1차 피난민의 대구 유입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전쟁 발발 직후

<표 2> 대구시 인구 현황(1950. 12)[47]

연 도	인구수	남	여	가구수
1949. 5. 1	313,180	?	?	?
1950.12.31	269,406	125,051	144,355	51,728
1951.12.31	368,796	170,654	198,142	71,431

47) 위의 책, pp. 28-30. p. 41.

1차 피난민들은 서울을 비롯한 38선 이남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상당수가 대구, 부산지역으로 피난 왔던 서울시민들 가운데에는 8할이 월남동포였고 나머지가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가족이었다.[48] 이들은 고향이 수복되면 즉시 귀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9·28수복과 함께 대부분 귀향하였다.

⑵ 1·4후퇴 직후 피난민의 대구 유입

1·4후퇴 이후 전시 피난인구의 이동으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오고 다시 이 피난인구의 유입으로 대구,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도시지역 인구의 급증현상을 가져왔다. 여기에 북한지역 피난민마저 유입되면서 1차 피난민보다 전체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1·4후퇴 직후 1951년 1월에서 5월 사이 남한 내 전체 피난민 규모는 자료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약 500여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49]

서울시민들은 대부분 열차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서울역장이었던 신순우는 "전국의 피난민은 1950년 12월 10일부터 1951년 1월 25일까지 7천여 량에 126만 7천명을 수송했습니다. 마지막은 1월 4일 20량 정도의 화차로 9회에 걸쳐 2만 7천 여명의 피난민을 수송했어요"라고 회고하였다.[50] 12월말까지 대체로 약 40%의 시민들이 피난을 떠났으며 1951년 1월 3일까지 마지막으로 30여 만명의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넘었다.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것은 전쟁초기 피난가지 못하고 잔류하여 온갖 시달림을 받은 경험 때문이었다.

---

48)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 잔류, 도강, 피난」, pp. 45-46.

49) 『한국전란 1년지』, p. D34 ;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3. 20일자). 사회부장관은 남한내 피난민을 총 5,757,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50) 『민족의 증언』 제3권, p. 317 ; 「국회서류방기사건 요지」, 『국회사』, p. 498.

북한 피난민들은 평양, 흥남, 원산 등에서처럼 군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로 피난한 경우 외에는 도보로 남하하거나 작은 선박으로 피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 선박을 이용한 피난민들은 대부분 5톤 안팎의 작은 선박에 의지하여 남하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자연 재해로 조난 당하기가 일쑤였다. 육로로 걸어오거나 동서해안에서 목선을 타고 왔던 피난민들은 기아와 혹한을 견디며 피난하는 큰 고초를 겪었다.[51]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이동 인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함경북도나 평안남북도 보다는 당시 38선이 가까운 황해도 강원도 및 함경남도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피난을 하게 되는 곳은 주로 대구,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와 제주도가 가장 많았다.[52]

대구지방에도 1·4후퇴 직후 많은 피난민이 쇄도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3>은 1·4후퇴 바로 직후부터 5월까지의 각도별 피난민 규모와 수용, 그리고 조사시점까지 기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표 3>에 의하면, 1·4후퇴 직후 1951년 1-5월 사이 전체 피난민의 규모는 4,890,339여 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장 많은 피난민이 집결된 지역은 경북지역, 그 다음으로는 전남, 충북,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53] 경북지역에는 2월 7일 현재 1,368,586명이던 피난민이 한 달 후인 3월 6일 현재 다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난민의 규모는 충남, 전북, 경남지역에서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 5월까지 계속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피난민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민을 포함하여 1차 피난시 많은 고초를 겪은 주민들이 상당수 피난길에 나섰기 때문일 것이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북한

51) 『임시수도 천일』 (하), p. 225.
52) 전광희, 「한국전쟁과 남북한 인구의 변화」, p. 69.
5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후방지원사』, 1997, p. 555.

<표 3> 1951년도 각도 피난민 상황[54]

내 용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경기도	계
피난민수	921,500	515,702	433,500	1,004,343	1,368,586	530,703	96,570	19,930	4,890,339명
수용인원	100,000	305,364	243,500	312,950	32,537	194,772	28,767	19,930	1,237,820명
수 용 소	37	55	32	159	66	117	24	-	490개
조사월일	2.4	2.5	1.15	1.29	2.7	2.9	2.4	1.20	-
피난민수	-	845,830	533,353	-	1,383,208	637,866	162,959	-	-
수용인원	-	-	-	-	-	-	-	-	-
수 용 소	682	125	169	-	330	805	99	-	-
조사월일	3.20	5.19	5.5	-	3.6	5.5	3.20	-	-

주민들이 상당수 월남하였고 또 1·4후퇴 직후 설상가상으로 국민방위군의 해체로 또 다른 피난민 수십 만명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표 3>의 1951년 초의 통계는 그러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대구지역에도 전쟁 전기간동안 이시기에 가장 많은 피난민이 유입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시기(1951. 1-6월)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그때의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다. 즉, 대구시는 당시 대규모의 피난민들이 대구 남구지역 등에 유입되어 대구시청만으로 행정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1951년 6월 9일 남구지역을 관할하는 남부출장소를 비롯하여 동부·서부·북부 등 4개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관할구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55]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구시사』는 "1·4후퇴로 북한지방의 피난민이 추가되어 도시의 변두리는 물론 도심지내의 도로까지 점유하여 판자촌을 형성하였는데 실례로 대구시청에서 남쪽으로 뻗은 삼덕동 도로는 1960년대 초까지 피난민의 판자촌으로 점유되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56]

---

54) 사회부, 「피난민구호상황주보」 제4호(1951. 1. 28-2. 3), 정부기록보존소 소장자료(이하 같음) ; 『한국전란 1년지』, pp. D33-34.

55) 『대구남구지』, p. 181 ; 『대구시사』 제3권, p. 229.

한편 정부는 1951년 초 피난민의 쇄도로 병참보급 등 군사기지인 대구, 부산 등지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의 피난민을 소개하는 작업도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57] 당시 김천, 금릉군과 대구 부근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소개가 전개되었는데, 1951년 2월 초의 상황을 정리하면 <표 4>, <표 5>와 같다.[58]

<표 4>와 <표 5>에 의하면 2월초까지 대구지역의 피난민들은 전남지구와 거제도로 일부 소개되었고, 김천과 금릉 일대에 집결한 74만여의 피난민들이 후방지역으로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59] 같은 시기 부산지구에서는 1951. 2월초 29,176명의 피난민을 거제, 제주로 강제 이송되어 국회에서도

<표 4> 대구지구 피난민소개 이주상황

구분 \ 지역	회 수	소개 인원수	동원 차량	비고
전남지구	-	1,272	-	1. 12일~31일 보행으로 거창을 거쳐 전남지구로 이송
거 제 도	9	2,482	79	
합 계	9	3,754	69	

<표 5> 김천·금릉 지구 피난민의 이송 현황

구분 \ 지역	피난민 수	소개 인원수	비고
김 천 시	300,720	279,600	피난민 집결수는 도보로 남하하여 집결된 피난민임
금 릉 군	443,334	412,275	
합 계	744,054	691,875	

56) 『대구시사』 제1권, p. 1208.
57) 내무부 치안국, 『경찰십년사』, 백조사, 1958, pp. 173-174 ; 윤장호, 『호국경찰전사』, 제일, 1995, pp. 104-105.
58) 사회부, 「피난민구호상황주보」 제4호(1951. 1. 28~2. 3).
59)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5. 1일자).

문제가 되고 있었다.[60]

이에 관해 최창순 사회부차관은 "1951년 1월 19일 현재 많은 피난민이 집결돼 있습니다. 미 제8군에서 계엄사령부에 통지가 오기를 1주일 이내에 급속하게 적당한 장소에 이송시키라는 것입니다. 사회부는 제주도에 50만 명, 거제도에 10만명, 기타 지역에 각각 적당히 분산시키는데 수송만 책임지고 있습니다"[61]라고 답변하여 강제 소개는 미 제8군으로부터 작전상 이유를 들어 대구, 부산 지구에 집결되어 있는 피난민을 다른 지역으로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너무 갑작스런 조치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계속 증가하던 피난민 숫자는 1951년 7월 이후 전국적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띠었다. 대구지역 피난민은 1951년 9월 30일 현재 북한을 위시하여 서울 등지로부터 남하한 수치가 16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었고, 1952년 9월말 현재 12만 4천여명, 53년에는 104,894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62]

1951년 9월 현재 대구지역 피난민 규모가 16만 8천여 명이었다는 사실은 1951년 7월 휴전협정으로 전선이 교착되고 안정화되자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피난민들이 상당수 귀환한 사실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피난민 수치를 대구인구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6>의 대구 인구추세의 통계자료가 다소 부정확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1951년 12월과 1952년 12월 현재 인구수가 1950년에 비해 약 10만에서 13만 7천여명 정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난민의 유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앞에서 살펴본 1951년 9월, 1952년 9월 현재의 피난민 수치와 정확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근접됨을 알 수 있다.

---

60) 사회부, 「피난민구호상황주보」 제4호(1951. 1. 28~2. 3).
61) 위의 자료.
62) 『대구시사』 제3권, p. 30, p. 52, p. 131, p. 565.

<표 6> 대구시 인구 추이[63]

연 도	인구수	남	여	가구수
1950. 12. 31	269,406	125,051	144,355	51,728
1951. 12. 31	368,796	170,654	198,142	71,431
1952. 12. 31	406,966	188,821	218,145	74,807
1953. 12. 31	393,852	184,532	209,320	69,173
1954. 12. 31	405,529	192,825	212,704	72,425

다시 말하면, 대구지역 피난민 규모는 전선이 교착된 1951년 7월부터 휴전이 성립된 1953년 7월까지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10만에서 13만여 명 정도로 유지되었다고 추산할 수 있다. 1953년 12월의 감소된 수치는 휴전으로 인하여 일부 피난민이 귀환하였기 때문이고, 1952년 12월 현재 피난민 숫자 총 2,394,918명 가운데 북한 피난민은 685,316명에 달하였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은 하고 있는 피난민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64]

이상으로 1·4후퇴 이후 피난민의 대구 유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시기 대구에는 북한피난민뿐만 아니라 남한지역 전재민과 황폐화된 농촌을 이탈하여 들어오는 유랑민이 상당수 유입되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전쟁종식 후 일부는 원래의 거주지로 귀환하였지만 북한 피난민과 이농전재민들은 대부분이 대구에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65]

63) 『대구시사』 제3권, pp. 28-30, p. 41.
64)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과 남북한 사회와 문화」, 『한국전쟁사』 제6권, 1993, p. 280.
65) 『대구시사』 제3권, p. 131.

4. 대구지역 피난민 수용과 구호 활동

(1) 초기 대구지역 피난민 수용과 구호 활동

전쟁기간 동안 대구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기지이며 군사령부와 각종 군사기관이 위치한 군사 중심지였다. 또한 이재민의 피난처로서 국민의 보건과 치안상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대구 인구는 해방 직후 일본, 만주 등지에서 해외동포가 귀환함에 따라 약 30여 만명 정도였으며, 주택의 사정은 피난민에게 방을 제공할 수 있는 가구가 1만호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피난민수용을 위해 피난민수용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공공건물은 물론 개인건물에까지 피난민을 수용하게 되었다.

정부가 대구를 임시수도로 삼으면서 대구지역의 학교는 모두 휴교하였고 중요 시설물들은 정부기관이나 군 기관에 접수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거점으로 변모하였다. 대구천도 사실이 알려지자 각지의 피난민들이 대구로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66]

1950년 7월 24일 사회부장관 이윤영은 영남 일대를 순회한 후 경상남도 지사실에서 "지금 남한 각지의 피난민은 1백 10만 5천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38만명만이 수용되고 나머지는 연고자의 가정 등지에 입주해 있다"고 하여 부족하나마 전국 1백 10여 만명의 피난민에 대한 구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67]

동년 7월 말 미 대사관 직원인 세르바체에 의하면, "나는 그때 남쪽으로 내려오는 피난민을 돌보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나는 대구도청의 임시정부

66) 대구시청, 『대구남구지』, 명인문화사, 1995, p. 178.
67) 『임시수도 천일』 (하), p. 165.

건물에서 피난민을 위한 생필품을 한국 보건사회부로 보내주었다. 피난민의 이동을 조정하고 있던 참모차장과 두 부관의 도움을 받아 생필품을 수송하였다"고 하여 미 대사관에서 국군과 협조하여 피난민을 구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대구 시민들은 미국인들이 시내에서 철수하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대단히 동요하였다"고 회고하였다.[68]

피난민 대열이 계속 남쪽으로 밀려 낙동강방어선까지 이르게 되자 국회에서는 동년 8월 1일부로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을 통과시켜,[69] 피난민의 수용대책을 마련하고 또 일정지역으로의 집중 이동을 견제하고 각 지방으로 분산 남하를 지도하였다. 이에 긴급조치로 경북 66개소·충북 37개소·충남 55·전북 43·전남 162·경남 117·제주 24 등 도합 504개의 수용소를 긴급히 마련되었고 전국에 200개의 치료·방역반이 가동되었다.[70] 보건부와 사회부는 1950년 7월 중순부터 피난민문제의 대책으로 이들을 분산 수용하고 피난민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1일 2홉의 양곡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후 미 정부기관에서 제공한 담요 옷 등의 생활필수품을 피난민에게 분배하였다.[71]

피난민들에게 줄 구호물품의 수송은 군 수송수단을 이용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각 시도에 피난민 수용대책을 마련케 하고 분산 남하를 지도하였으며, 긴급조치로 전국에 임시 피난민 수용소를 마련하였다.

피난민들은 노천에 가설된 소위 주먹밥수용소 등을 포함하여 경북지역 수용소에 15만 3천명이 수용되었으며, 경남지역 수용소에 10만 5천명, 전남북 지역 수용소에 12만 8천명이 각각 수용되었다. 이때 사회부장관은 "피난민의 구호를 위해 1개월 분 예산으로 3억 7천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쌀 시가로 1만 1천 가마에 불과한 것이었다. 각 도에 지

68) 세르바체, 「피난민 구호를 회상」, pp. 254-255.
69)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145호, 1950. 8. 1일부); 『한국전란 1년지』, p. C56.
70) 육군본부, 『육군인사역사』 제1집, p. 604; 『한국전란 1년지』, p. C56.
71) 세르바체, 「피난민 구호를 회상」, p. 256.

<표 7> 각도 구호비 현황(1950. 11. 15 현재)[72]

(단위 : 원)

도 별	구호비	도 별	구호비
경상북도	1,210,844,000	전라남도	123,881,500
경상남도	1,207,500,000	전라북도	109,549,500
충청북도	39,949,500	서 울	108,716,000
충청남도	138,724,500	강 원 도	80,587,000
경 기 도	134,044,500	제 주 도	11,630,000
기 타	22,331,500	총 액	3,284,679,000

출된 구호비 현황은 <표 7>과 같다.

정부가 1950년 11월 15일까지 각 도에 지출한 구호비는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가장 많았고 기타 22,331,500원을 포함하여 총 3,284,679,000원이었다. 상기 구호비의 배분은 당시 대구, 부산 지역에 피난민이 집중되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유엔군의 피난민 지원상황은 유엔의 안보결의에 의거하여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 의류, 기타 금품의 원조 등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73] 유엔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본격적인 구호는 1950년 10월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한국 민간인구호와 관련하여 유엔안보이사회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유엔사무총장은 한국구제를 위한 지원자금의 설치계획을 종료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9월 중순 이후 유엔에 식량 및 물자를 긴급 요청하였고, 유엔의 구호물자는 10월 이후 도착하였다.[74]

유엔군사령부 통제하의 구호활동은 피난민 구호에 큰 기여를 하였다. 유엔의 '한국민간인 구호계획'에 의하면, 1950년 구호비는 9,376천 달러였으

72) 『한국전란 1년지』, pp. D39-40. 당시 1인당 하루 양곡 3홉과 부식비 50원씩을 배당하였는데 이것도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돼 많은 혼란을 겪었다.

73) 『한국전쟁지원사』, p. 232.

74) 『한국전란 1년지』, p. D53.

며 품목별 비율은 식료품 40%, 의류 24%, 기타 비료 연료 건축자재 의약품 등이었다.[75] 그러나 군의 통제하에 피난민 구호가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국제기구나 민간인 단체 등에 의한 자율적인 구호노력이 제한된 점도 없지 않다.[76]

당시 국내 민간활동으로 김활란 박사의 적십자위원회가 피난민의 수용, 구제물자 배급지원, 의용간호부 지원, 부상자 치료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구국총력동맹 등이 결성되어 노력봉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세계보건기구, 국제피난민기구, 적십자사연맹 등에서도 전문가를 보내어 구호사업을 계획하였고, 미국내 각 기관에서도 피난민을 위한 구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유엔군사령부와의 마찰로 인해 귀환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낙동강방어선 시기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피난민의 구호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피난민 분산 및 수송 그리고 통제에 대한 노력을 적지 않게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낙동강방어작전 시에 피난민 구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피난민 구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구증가로 대구지역은 막대한 전재민과 피난민으로 인하여 도시 변두리는 물론 도심지 내에 이르기까지 무허가 건축과 판자촌이 밀집하고 사회범죄가 증가하는 등으로 전시풍조가 나타났으나, 그러한 어려움은 대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유엔의 구호원조로 극복되기 시작하였다.[77]

⑵ 1·4후퇴 직후 대구지역 피난민 수용과 구호활동

1951년 1·4후퇴 시기는 남침 직후의 초기상황과는 달리 적의 진격이 대

75) 『한국전쟁사』 제3권, p. 540.
76) 『한국전란 1년지』, p. 277.
77) 『대구시사』 제3권, p. 131.

체로 오산-제천-영월-삼척선에서 저지되었으므로 피난민들을 남쪽 각지에 분산 수용할 수 있었다. 사회부에서는 국방부, 내무부와 협의하여 피난장소를 전국적으로 나누어 경상남북도, 전라남도의 일부, 전라북도의 전 지구, 충청남도, 제주도로 정하는 한편 각지 소개민은 그 소재지에 따라 <표 8>과 같은 지정장소로 소개 계획이 이루어졌다.

즉, 38선 이북의 피난민은 충청남도 및 전라남북도로 지정되었고, 서울과 경기도지구의 피난민은 양분하여 일반 시민은 전라남북도, 기타 피난민은 경상남북도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피난민의 수용계획을 수립하여 피난 도중의 급식과 보건을 계획하였고 각 도별 피난장소는 <표 8>과 같이 정해졌다.[78]

피난민들은 <표 8>과 같이 지정되었으며, 국군과 유엔군이 영등포를 재탈환한 51년 2월 10일 현재 피난민수용 분포를 보면 경상북도 북부지역 47만·울진 12만·부산일대 30만·공주 6만·아산일대 27만·평택 10만·천안 30만·청주 15만·충주 5만·괴산 5만·보은 40만 명 등이었다. 이런 방대한 피난민을 수송한다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이들을 수용 구호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79]

<표 8> 각도별 피난 장소

도별 구분	지정 도시
충남지구	논산·대덕·공주·서산·홍성·온양·대천·부여·예산
호남지구	군산·김제·부안·이리·전주·부여
전라남도	목포·여수·해남·진도·완도·당진·고흥·광주
경상북도	대구·경산·청도·영천·경주
경상남도	부산·울산·마산·고성·거제도·김해·사천·밀양·통영·남해·동래
제 주 도	전체

78) 『조선일보』 1950년 12월 18일자.
79) 『민족의 증언』 제3권, p. 318.

대구의 피난민 수용소는 1950년 12월 말경부터 준비되었으며, 대구지역 내에 주로 신천 건너편, 대구역 주변, 동부와 북부지대, 그리고 비산동 등 서부 외곽지대 등에 임시수용소가 마련되었다.[80] 도지사와 시장의 통제하에 난민구호대책위원회가 수용소를 준비하였으며, 통상 10여평 남짓한 수용소에 150여명 가량 수용되었다. 이것도 1951년 1월부터는 한 건물에 수백 명씩 되었다.

대구 지역에는 각지에서 피난 온 소개민들의 행렬은 계속되었고 멀리 북한지역으로부터 남하한 피난민이 속속 도착함으로써 인구 포화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거리와 골목에는 인파로 홍수를 이루고 있어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하였다. 당시의 피난 실상은 "거리 골목 구석마다 사람의 물결이 넘치고 밥집, 다방 요정까지도 설 틈이 없다. 심지어 다리 밑 산비탈 어디라고 할 것 없어 빈자리가 드물었다. 터질 듯한 도시는 주택난 식수난 식량난의 소동 속에 먼지와 쓰레기에 싸여있다"[81]라는 데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사회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피난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수원에 15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을 수송할 예정이나 수송기관도 없는 상황이었다. 충북에서 보내온 차관 보고에 의하면 현재 각지 피난민들이 식량부족, 구호시설 미비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82] 국회는 정부의 피난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판하였고 그 대책을 촉구하였다. 국회 비상사태수습대책에 관한 긴급질문으로 "지금 오산, 평택 등에 많은 피난민이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83]

그러나 정부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해안과 산악지대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도보로 남하했고 벽지까지 구호품이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사, 동사한 경우도 많았다. 보건사회부장관의 보고에 의하

80) 『대구시사』 제3권, p. 52.
81) 『임시수도 천일』 (하), pp. 230-231.
82) 『경향신문』 1951년 5월 8일자.
83)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1. 16일자) ; 『국회사』, p. 498.

면, 1951년 4월 동안 기아와 질병으로 상당수가 사망하였으며 20여 만명 이상에 대한 긴급구호가 절실한 상황이었다.[84]

제8차 본 회의(1951. 1. 17)에서 "1·4후퇴로 인한 백만 이상의 피난민이 금강 이북에서 비참한 실정 하에 있다. 그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이진수 의원의 제기가 있은 후, 1월 20일 제11차 본 회의에서 김용우 의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1월 27일 목적지인 수원 등지를 향해 부산을 출발하여 2월 11일까지 15일 동안 피난민 구출활동을 마치고 2월 12일 제22차 본 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를 하였다.[85]

김용우 위원장 등은 1월 27일부터 피난민 상황을 점검하여 열흘 전까지만 해도 백만 이상의 전재 피난민이 노상에서 동사, 아사 직전의 비참한 상황하에 있었으나, 이미 약 5, 60만명은 충북, 충남 등지로 소개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들 중 약 15만명 정도의 서울, 강원지구 피난민들이 귀환하고 있다고 하였다.[86] 이들도 충북 민사처장의 호의로 쌀 1만 5천 가마를 임시 조치하여 우선 기아는 면하였다.

위원들은 우선 피난민의 북상방지를 설득한 다음, 국방부, 보사부 등 관계당국에 긴급 방역대책과 기타 적절한 구호대책을 요구하고 또한 충북지역에 집결된 도민 120여 만명에 피난민 5,60여 만명에 대한 식량대책을 긴급 요구하였다.[87] 위원들이 파악한 기타 지구의 피난민 소개상황은 옥천, 영동지구에 약 10만 명, 함창과 예천에 각각 10만여 명, 포항 경주에 각각 약 6만여 명이 분산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치로 최소의 구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였다.[88]

피난민 구호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전쟁초기의 피난민

---

84)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5. 24일자).
85) 「특별위원회의 활동」, 『국회사』, p. 488.
86)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3. 27일자).
87)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2. 10일자).
88) 「제11차 국회본회의 속기록」(1951. 1. 20); 「피난민강제소개 및 양곡정책에 관한 긴급질문」(1951. 1. 20), 『국회사』, pp. 498-502.

구호의 문제점을 교훈으로 하여 본격적인 구호사업에 착수하였다. 서울시민의 2차 피난시 비교적 희생이 적었던 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요소에 설치된 사회부의 구호대책본부 덕분이었다. 서울-대전-광주와 대전-대구-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약 50여 개의 구호대책반이 설립되었으며, 구호반이 식량과 숙소를 제공하였다.

구호대책본부는 이때 피난민 구호의 기본방침을 정하였다. 즉, 먼저 구호대상을 정하고 구호에 관한 일체의 경비와 물자는 원칙적으로 지방행정기구를 통하여 요구 대상자에게 분배하였으며, 구호대상자에게는 1일 양곡 3홉과 부식비 및 연료비로 50원을 지불하고 그밖에 의료 및 기타 구호물자를 분배하였다.

기존의 건물이나 일반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천막 확보를 통해 수용인원을 증가시키는데 노력하였다. 귀환자를 위해 중간 기착지용 천막도 확보하고 노·유·병약자를 위해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였다.[89] 실제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의 구호품 지원뿐만 아니라 유엔의 전문고문 파견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90]

그러나 각 도별 피난민 수용인원이 최고에 달했을 때 현황은 1951년 3월 25일 현재 1,729,516명이었고, 귀향민을 포함하여 정부가 구호한 피난민의 숫자는 5월 16일 2,586,265명으로 최고였다. 정부에서 마련한 피난민 수용소는 707개에 불과하여 20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정부의 수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91] 이들 피난민중 실제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은 전체중에 소수였고 나머지는 결국 자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1952년 현재 피난민 구호는 경기 지역이 피난민 855,064명 중 556,7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가 피난민 274,241 중 163,332명으로 나타났다.[92] 그밖에 사회부에서는 1951년 5월말까지 구호병원 70개소를 설치하고

89) 「한국전란 1년지」, p. D32, p. D38.
90)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2. 9일자), (1951. 10. 17일자).
91) 『한국전쟁후방지원사』, p. 555.

매주 약 115,00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대구지역 피난민은 1952년 9월말 현재 12만 4천여 명 중 1만 4천 8백여 명이 40여 개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다.[93] 사회부는 또한 상이군경에 대한 구호사업으로 동래 온천에 '중앙상이군인정양원'을 설치하고 1,000여 명의 상이군인을 수용하였다. 전쟁 발발부터 1년 동안 이러한 군사 원호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총 171억원 규모였으며, 유엔이 무상 공급한 8만톤의 식량은 피난민구호에 사용되었다.[94]

당시 국회의 월동대책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년간 전 피난민에 대한 구호양곡으로 280만석(1억 8백만 불 상당)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한된 원조자금중 이와 같이 막대한 액수를 식량으로 소비함으로써 결과되는 생산시설 복구사업이 차질을 우려하고 금년 피난민 월동 대책에 대해서는 원만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95]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유엔에서 지원된 피난민 원조자금이 피난구호책보다 생산시설 복구에 비중을 두게 됨으로써 발생한 측면이 많았다.

한편 1·4후퇴 시기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월남하게 되자, 정부는 이들을 각 도별로 분산시켰으며 경기지역에 352,915명으로 가장 많이 수용하였으며, 경북지역에는 63,597명을 수용하였다.[96] 북한 피난민들은 남하하면서 많은 희생을 겪었다. 이들이 대규모로 월남하게 된 것은 북한 공산치하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고, 다음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유엔공군의 폭격과 공습을 피해 월남한 것이었다.[97]

정부는 민간단체와 북한 동포 및 남한 전재민을 위한 피난민수용소 설치

---

92) 공보처통계국, 『대한민국 통계년감』, 1952, pp. 293-294.

93) 『대구시사』 제3권, p. 565.

94) 『한국전란 1년지』, pp. A79-80. 1951. 1월 현재 수용소 피난민 수는 65만명이었고 이들에게 지출된 구호비는 56억원 정도의 규모였다.

95) 『국회사』, p. 615;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10. 25일자).

96)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 7. 3일자), (1952. 2. 20일자), (1952. 7. 6일자).

97)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0. 12. 8일자), (1951. 12. 12일자);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 잔류, 도강, 피난』, p. 53.

와 구호물자 배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지만,[98] 대규모로 유입되는 피난민을 구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편 정부는 피난학생들을 피난지 소재 각 학교에 등록 수용하게 하고 수 개의 학교를 연합하여 학교를 설치하는 등 비상조치를 강구하였다. 1951년 2월 정부는 전시 교육에 관한 특별조치요강을 제정 발표하여 중단된 수업을 재개하도록 각급 교육기관에 시달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① 피난학생의 취학독려, ② 가교, 특설학교 또는 분교 설치, ③ 북한 피난학생의 피난지 수용, ④ 도시 피난학교의 설치, ⑤ 전시 연합대학 설치, ⑥ 벽돌 교사 건축, ⑦ 원조 임시교사 건축 등이었다.[99]

대구시 자체가 전화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경북일대의 전화를 입은 곳에서는 학교시설이 크게 파괴되었고 대구시내에서도 학교시설의 군 점령으로 대구지방 교육은 심각한 시설부족에 봉착하였다. 1951년 대구인구가 현격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9>와 같이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대구시에서는 피난 아동들을 시내 각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울에서 피난 온 아동들이 대구지방 교사들의 방언에 대한 기피와 대구 현지 아동들과 융화되지 못함으로써

<표 9> 전시연합 초·중·고교 학교와 학생 규모[100]

학교 / 지역	연합 초등학교(1953. 3)			연합 중·고등학교(1952.12)		
	학 교	학 생	교 사	학 교	학생(중/고)	교 사
부 산	24	32,937	404	45	10,038 / 8,698	611
대 구	14	11,705	134	4	2,159 / 975	73
대 전	3	2,587	27	1	675 / 521	21
수 원	2	1,195	15	1	916 / 608	35

98) 『한국전란 1년지』, pp. A29-30.
99) 『대구시사』 제3권, p. 645.
100) 위의 책, pp. 644-645.

등교를 기피하게 됨에 따라 그 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서울시 당국에서는 이 타개책으로 대구시내의 적당한 장소에 천막을 치고 임시교장을 설치하여 피난한 서울시의 교직원을 배치하여 강의하였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달성공원과 대명동, 신암동 등지에서 시울시 관할의 학교가 설치되었는데 중·고등학교가 4개교에 학생 3,134명, 초등학교 14개교에 11,705명이었다. 그러나 대학은 당시 대구에는 고려대학의 분교가 피난대학으로 설치되었을 뿐 연합대학은 설치되지 않았다.[101]

전국의 안정에 따라 많은 피난민도 수복지구로 귀환하게 됨에 따라 대구시의 제반질서는 차츰 회복되어 갔다. 피난민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도심보다는 변두리지역에 거주하였으며 또 대부분이 상업활동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서문시장과 그리 멀지 않은 남구지역에 정착하였다. 이중 월남한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점차로 정착하여 상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도심지로 이주하게 되었다.[102]

4. 결 어

지금까지 대구지역 피난민의 실태와 특징을 크게 전쟁 초기~반격시기와 중공군 참전~정전까지의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문에 정리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기로 한다.

첫째, 정부는 남침 직후 「긴급명령」 제1호(6. 25)와 제2호(6. 28), 그리고 비상계엄령과 치안명령 등을 하달하여 시민들의 질서유지와 아울러 피난민 통제를 위해 전력하였으나, 사전에 비상계획이나 철수 및 구호계획이

101) 『대구시사』 제3권, p. 647. 전시 연합대학은 문교부가 1951. 2월~1952. 5월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등에 설치하였다. 국방부, 『한국전란 2년지』, 1952, pp. C206-207.

102) 『대구남구지』, p. 182.

전무하였으므로 갑자기 집중되는 피난민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대구에서도 '긴급 군·경 합동회의'와 '비상사태대책위원회'가 조직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도청이 피난민 수용에 대한 전시행정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비상계획이라든가 피난민들의 구호를 위한 식량 및 주택의 확보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전쟁 초 대구를 비롯한 낙동강선 내선에서 피난민으로 야기되는 군사작전의 제반 장애를 해결하지만, 한편으로 피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4후퇴 전후시기 피난민 철수정책은 전쟁 초의 교훈을 살려 대체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북한 피난민 구출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초기작전에서의 교훈을 고려하여 대구, 부산 등 북한 피난민 대열 속에 침투한 오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다.

셋째, 대구지역 피난민의 규모는 시기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전쟁발발 이후 정부의 부산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약 30여 만명의 피난민이 집중되었다. 정부의 부산 이전과 일시나마 대구 소개령이 하달된 직후부터 피난민을 포함한 대구시민의 일부가 대구이남으로 남하하여 피난민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서울수복이후 각지의 피난민들이 상당수 귀환하였고 피난에 나섰던 대구시민들도 대부분 귀환하면서 다소 증가되었다.

중공군의 참전이 알려지고 유엔군이 전선에서 밀리게 되자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주민들이 동요하여 피난에 나섰으며, 대구 시민들도 상당수 다시 피난길에 나섰다. 이때의 시기 대구인구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4후퇴 직후부터 6월까지 전국의 피난민 수는 오히려 가장 정점에 이르렀고 대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구 피난민은 그 후 1951년 7월 이후 점점 감소하다가 9월 30일 현재 16만 8천여명, 1952년 9월말 현재 12만 4천여명, 1953년 104,894명으로 각각 유지되었다. 휴전협정으로 전선이 교착되고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0만에서 13만여명 정도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쟁기간 동안 대구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기지였고 군사령부와 각종 군사기관이 위치한 군사 중심지였으며 또 이재민의 피난처로서 국민의 안정과 치안 상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구시는 피난민에게 방을 제공할 수 있는 가구가 1만호도 안되었으므로 피난민수용 임시조치법도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대구는 전쟁초, 대구천도 직후 그리고 1·4후퇴 직후 급격한 인구증가로 무허가 건축과 판자촌이 밀집하고 사회범죄가 증가하는 등 위기가 있었으나, 민·관·군의 협조와 유엔의 구호원조로 피난민수용소와 임시학교를 설치하여 제반문제를 극복하였다.

다섯째, 1·4후퇴 이후 북한의 월남민에 대한 피난민 구호대책이 전무하였고, 그것은 2차 피난시기 피난민 구호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북한주민들이 대거 월남하자 대구, 부산 등의 대도시에 수용소와 구호센터를 증설하여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북한 피난민까지 구호하기엔 태부족이었다. 또한 전쟁기간동안 유엔이 제공한 피난민 원조자금 중 피난민 구호보다 오히려 대부분 생산시설 복구에 상당부분 운용함으로써 구호대책의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원고투고일 : 2003. 10. 29, 심사완료일 : 2003. 11. 20)

주제어 : 대구, 민간인, 피난정책, 소개, 구호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Refugees in the Daegu Area during the Korean War

Yang, Yong-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refugees and refuge policy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early period of the War, the lack of ROK government refugee control measures resulted in significant confusion and difficulties in controlling refugee movement.

After the Taejon Battle, refugee control was a major concern of the ROK government. So the ROK government began to disseminate refugee control policies to protect the army as well as refugees and reduce impact of road-bound refugees on military operations.

With certain exceptions, ROK policy restricting movement of refugees was established in late July, 1950. However, at some point, they escorted Koreans, in an effort to get them out of harm's way or to clear them away from the army ground positions.

The Korean and U.N. army soldiers were legitimately fearful of the possible infiltration of North Korean soldiers who routinely entered the lines in groups disguised as civilians in refugee columns and then attacked their positions from the rear. These problems were overcoming partly in the period of the Walker Line.

And as the ROK government was prepared in controlling refugees from December 1950, the refuge policy was resonable to clear and control the refugees of Jan

1951.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and analyze the refugees and refuge policy of 1950s and 1951s.

Key Words : refugee, civilian, policy, Deague, Korean War.

KCI